

잔혹해지는 학교 폭력

극심한 피해 발생 전 드러나지 않아 폭력에 둔감·흉포화 광산경찰, 가해 학생 3명 구속영장 신청…29일 실질심사

학교 폭력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데도 '침묵의 방관자'들이 많아 사망·중상해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다보니 폭력성에 둔감해지고 흉포화되는 경향도 나타나는 모양새다.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폭력 성이 성인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등 교육당국의 관리 대책은 형식적이거나 실효성 없는 일회성 대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재점검이 시급 하다고 지적한다.

◇경찰, 학교폭력 가해 학생 3명 구속영장=광주 광산경찰은 27일 또래 학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광주일보 7월 5일 6면〉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동폭

행·공동상해·강제추행 등)로 같은 학교 학생 A (17)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 사)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피해 학생에 대한 괴롭힘 동영상과 학교 폭력 설문조사를 토대로 11명을 가해 학생으로 특 정한 뒤, A군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가해 학생들의 범행 가담 횟 수와 시기, 범행 정도 등을 감안한 조치로, 경찰이 학교폭력 혐의로 가해 청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잔혹성을 엿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휘두 르는가 하면, 폭력 영상을 퍼나르는 등 폭력성에 둔 감한 모습을 보였다.

◇학교폭력 가해자, 구속 매년 늘어=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 수사를 받다 구속되는 청소년들도 증가세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학교폭력을 저지르다 붙잡혀 구속된 청소년은 2016년 1명뿐 이었지만 이후 3명(2017년)→4명(2018년)→6명(2019년) 등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구속된 학생은 없었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학교 등교일이 많지 않았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 또래 여고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고교생 등 3명이 구속된 바 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그 형태의 잔혹성과 흉폭성이 심각해지고 있는 경향을보이고 있다"면서 "청소년범죄와 관련, 빅데이터를이용해서 청소년들의 비행성을 예측하는 방안 등도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붉은 유혹 만개 27일 오후 백일홍이 만개한 담양 명옥헌림에서 관광객들이 발갛게 피어난 꽃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으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뻔뻔한 미쓰비시

강제노역 고령의 피해자 상대 '시간끌기 소송전'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사법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하며 90대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간끌기식 소송전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20일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한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에 대해 기각했다. 법원에서 지난 2월 9일과 3월 2일 미쓰비시 중공업의 항소에 대해 기각한데 이어, 또다시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세 번째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라며 "그러나 잇따른 항고 기각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은 재항고를 다시 신청, 앞선 2건 압류명령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참으로 뻔뻔하고 염치 없는 짓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판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을 뿐더러 이렇게라도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모습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결과가 뒤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장기화시키며 맞서는 것은 정당한 자기방어가 아닌 사법절치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볼썽 사나운 행위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 지급을 미루 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자치경찰제 정착 위해 법률 보완해야"

광주YMCA토론회…정치적 중립 등 주장

이달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도를 바람직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적 보완과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광주YMCA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광주YMCA 무지관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어떻게 안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은 "우선 자치경찰제는 국민의 이해도가 높지 않 고,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일을 앞두고 급하게 추진된 감이 크다"며 "'경찰법 전부개정' 의 취지에 맞지 않게 국가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 제방안, 정보경찰 개혁,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등 에 대한 내용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평가 했다

이어 바람직하게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는 ▲통제기구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의 중 요성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보다 많은 권한 부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에 대한 개입 최소화 ▲자치경찰위원회의 민주성·정치적 독립 성 확보 ▲실질적 권한 행사를 위한 입법 보완의 필요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선우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장은 "광주형 자치경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전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조급하게 치안정책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문제인식 및 진단과정에 보다 많은 시간과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인 신광식 변호사는 "자 치경찰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 자치경찰제의 출범과 함께 제기되는 여러 우려들이 불식되고 국민과 주민을 위한 진 정한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벌집 신고는 119"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폭염일수 증가로 인해 말벌 등 각종 벌의 활동이 활발해 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벌 쏘임 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 부했다.

올 상반기 출동 통계에 따르면 벌집제거 출동 은 31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9% 이상 증가했고,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으 로 올해 여름철 벌쏘임 사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 로 예측된다.

벌에 쏘이면 통증, 부종, 가려움증 등 피부에 한정하는 국소반응을 일으키지만 일부 벌독에 알 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은 혈압이 떨어지고 몸이 붓는 등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 우 적절한 응급조치가 없으면 쇼크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벌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벌집 발견 시 119에 벌집 제거 요청 신고를 해야 하고, 야외 활 동 중 벌에 쏘였을 경우 119에 신고 후 구급대원 을 통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본부는 벌 쏘임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환자 발생 시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한 특별구급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말벌보호복 등 8 종 166점을 추가 구매해 증가하는 벌집제거 출동에 대비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